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2023.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 : 이해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장)

공동연구원 : 조성민(더인디고 대표)

이선화(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이태현(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연구원)

자문위원

장 인 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고 재 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 민 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진흥원 본부장)

윤 영 미 (녹색소비자연합 공동대표)

이 정 자 (인권과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정 광 진 (사회정의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 석 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발간사

2023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 경 혜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
2) 연구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1) 선행연구 및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3
2) 장애계 대상 설문조사 실시	4
3) 관련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5
3. 연구추진 절차	6
II. 기후대응 정책 현황	7
1. 기후위기 현황과 영향	7
1) 기후위기의 심각성	7
2) 기후위기의 영향	9
2. 기후대응 정책	13
1) 국내 기후대응 정책	13
2) 해외 기후대응 정책	21
III.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 인식 수준 및 대응 방안조사	29
1. 조사개요	29
1) 조사목적	29
2) 조사대상	29
3) 조사방법 및 내용	31
2. 조사결과	32
1) 기본 정보	32



2)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인식	33
3) 기후변화 대응 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인식	36
4)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45
5) 장애계의 기후대응	49
3. 소결	53
IV.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57
1. 장애포괄 개념	57
1) 장애포괄의 의미	57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58
3) 인권기반의 장애포괄적 접근	61
4) 기후 정책에서 장애포괄적 접근	63
2.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67
1) 조사대상	67
2) 조사내용	67
3) 조사결과	68
3.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 방안	80
1)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개념 정립	80
2)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과제	81
3)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81
V. 결론 및 제언	84
1. 연구결과	84
2.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89
부 록	91

표목차

<표 I-1> 조사내용	5
<표 II-1> IPCC AR6와 AR5 보고서 주요 기후변화 요소 비교	9
<표 II-2>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강화 주요추진과제	19
<표 II-3>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 강화 주요 추진과제	20
<표 III-1> 조사대상자 수	30
<표 III-2>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31
<표 III-3> 설문조사 주요 질문내용	32
<표 III-4> 응답자의 성별	32
<표 III-5>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	33
<표 III-6>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 인식	33
<표 III-7>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34
<표 III-8>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이유_우선순위 3순위	34
<표 III-9>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책임	35
<표 III-1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도	35
<표 III-11>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36
<표 III-12>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	36
<표 III-13> 기관유형별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	37
<표 III-14> 환경 규제 강화되는 흐름에 대한 인식 여부	37
<표 III-15> 기관유형별 환경 규제 강화되는 흐름에 대한 인식 여부	38
<표 III-16>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대한 인식 여부	38
<표 III-17> 관련 소식 및 내용을 접하게 된 경로 (모두 선택)	39
<표 III-18>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부 역할	39
<표 III-19> 기관유형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부 역할	40
<표 III-2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	41
<표 III-21> 기관유형별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	42
<표 III-22> 기관유형별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	42
<표 III-23> 기관유형별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43



<표 III-24> 기관유형별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	43
<표 III-25> 기관유형별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 변화	44
<표 III-26> 기관유형별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45
<표 III-27>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45
<표 III-28>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문제	46
<표 III-29>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	46
<표 III-30>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 생각하여 취한 행동 (모두선택)	47
<표 III-31> 기관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모두선택)	47
<표 III-32>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배제됨_우선순위 3순위	48
<표 III-33>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 수준	49
<표 III-34>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노력 정도	49
<표 III-3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_우선순위 3순위	50
<표 III-36>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_우선순위 3순위	51
<표 III-37>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할 일	52
<표 III-38>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	52
<표 III-39>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민간기관에서 해야할 일	53
<표 IV-1> DAC CRS 코드 및 SDGs 내 장애(인) 명시 현황	57
<표 IV-2> 공여국별 2018년도 사업 대상 장애마커별 지원 규모 보고 현황	59
<표 IV-3> 장애포괄적 개발에 핵심적 인권규칙 적용 방안	61
<표 IV-4> FGI 참여자 일반 사항	67
<표 IV-5> FGI 질문 내용	68
<표 IV-6>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실행 방안	72
<표 IV-7>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82



▶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절차	6
[그림 II-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 비전체계도	17
[그림 II-1]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비전체계도	18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고, UN 기후협약 파리협적에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행동계획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홍수, 감염병, 재난 상황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식량, 식수 안정성 위협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감소 등의 간접적 영향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속 직·간접적인 영향은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됨. 기상악화로 인한 노후 건축물 피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한 먹거리 값 상승 피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법에서 모든 수준의 기후 행동에 장애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애인 포함 기후 정책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UN, 202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감소를 위한 노력,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에서의 차별 및 배제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국내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기후위기 정책에 장애포괄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목적을 설정함.

- 첫째,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ESG 경영 지표에서 기후대응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함
- 둘째, 장애계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장애계의 기후위기 및 대응정책 인식수준 파악
- 셋째,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장애계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 논의
- 넷째,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주체별(개인, 기관, 정부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II. 기후대응 정책 현황

1. 기후위기 현황과 영향

1) 기후위기의 심각성

-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간한 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2011~2020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도 상승했으며,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1971년 1.3mm/년 상승한 반면 2006~2018년 사이 3.7mm/년 으로 2.85배 증가했음.
- 둘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했을 때,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 일때 1.0~1.8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 일 때 3.3~5.7도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 셋째, 기후영향인자 변화를 전망했을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인자가 증가하고 호우와 홍수 또한 강화되고 빈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즉, IPCC의 6차 평가보고서(2022)를 통해 인간의 영향력으로 대기, 해양, 육지를 온난화 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기후 변화의 규모를 확인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영향력을 파악했음.

2) 기후위기의 영향

-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미치는 일반적 영향과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영향은 장마, 홍수, 폭염, 산불, 한파, 폭설 등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 지구적 영향을 가져옴.
 - 날씨 패턴을 바꾸고 폭염이나 가뭄과 같이 극단적 날씨 조건을 유발하고, 홍수와 폭풍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범위와 빈도에서 증가하고 있고, 매주 한 건의 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Light for the World, 2020).
- 반면,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성격을 가짐. 가장 큰 예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불평등의 관계의 비례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음(박병도, 2019). 온실가스의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인 선진국이 배출하는 반면, 그 피해는 온실가스의 3% 수준을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이 겪고 있다는 것임.
- 국제적인 불평등 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개인에게도 불평등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음.
 - 즉, 같은 지리적 공간 안에 위치한 동일한 기후재난에 직면해도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재난의 영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임.
 -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은 기후 변화에 따라 건강, 생계, 재난 위험, 이 동권, 정보력, 역효과 요인이 장애인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있음.

2. 기후대응 정책

-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외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 국내 기후대응 정책



- 국내 기후대응 정책은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이 대표적임.
-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9월 25일에는「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됐음. 이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을 명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규정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기준 26.4%에서 40%로 1.5배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가 조성을 위해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2) 국외 기후대응 정책

- 주요 국제 사회의 기후대응 정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장애 포괄적 기후 행동 COP26 옹호 문서’가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경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 능력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함. 파리협정의 경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반면, 장애포괄적 기후 행동 COP26 옹호 문서는 위와 같은 협약(정)에 장애인을 포괄하고자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 인권 및 법적 다원주의 센터 산하에서 활동하는 장애 포괄적 기후 행동 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 고안되고 국제 장애 동맹의 승인을 받았음.
- 포함된 주요 주제는 1)기후 거버넌스에서 장애인의 배제와 그 결과 2)왜 기후변화에 대한 장애인 권리접근이 필요한가? 3) 장애인이 기후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기후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에 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음.

Ⅲ.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 인식 수준 및 대응 방안조사

1. 조사 목적 및 대상

- 조사를 통해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를 확인하고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의 차별 및 배제,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들을 확인하고자 했음.
- 주요 조사대상은 IDA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옹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음.

2. 조사 결과

- 총 308명의 기관 종사자들에게 홍보를 거쳐 2023.09~10.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81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했음.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96.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은 응답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일상생활에 97.5%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우려하고 있었고,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37.0%)가 가장 많았음.
 -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50.6%로 절반 이상이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해서 명칭 정도만 들어봤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는 62.9%로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보다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응답자가 더 많았음.

-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절반 이상(54.3%)이었고,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장애계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74.1%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후대응을 위한 노력은 84.0%가 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에 장애계에서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28.4%)’가 가장 높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29.6%)’,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 방안 모색(28.8%)’ 순으로 응답하였음. 현재 장애계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개발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이었음. 상용화는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전세계적인 기후대응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으로 수립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임. 민간

기관에서는 장애계의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녹색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응답함.

IV.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1)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의 개념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시켜 장애인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포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장애포괄적 기후 대응 정책’이란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과제

-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녹색성장기본법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은 기후 취약계층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법이나 제도에 장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거나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첫째,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건강, 이동, 정보, 생계, 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장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함께 확인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는 기제가 마련되어야함.

- 셋째, 장애가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3)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적 차원, 기관 및 단체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영역에 따른 방안들을 제시하였음.
-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적 측면에서 언급하고 장애인의 권리기반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본 연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주체별 역할과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평등 영역과 관련됨. 따라서 건강, 정보, 이동, 생계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함.
- 기관 및 단체 차원에서는 정보,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영역과 관련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고, SDGs에서처럼 장애를 cross cutting 이슈로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개인적 차원	기후 변화에 대한 학습	건강, 정보, 이동, 생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 상황 인지·학습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기관 및 단체 차원	교육 / 역량강화	정보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 제공 장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정책 아젠다 형성	제도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의 국내외 불평등 사례 수집 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아젠다 형성
정부 차원	취약계층 관점 고려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	기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입안 시 다층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고려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 제도	기후 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 매뉴얼 제작 및 배포(시각자료, 점자, 쉬운글 자료 등)
	정책 결정 시 장애인 참여 확대	정보, 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취약계층 범위 확대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위기는 녹색사회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재난·재해 발생시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으나 정보접근의 제한 및 대응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기후위기에 따른 장애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2022년 ‘탄소중립 녹색사회를 위한 장애계 대응방안 연구’에 이어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사회에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계에 변화와 경각심을 일으키고,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 장애인을 포함한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장애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와 국제적 변화,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한 문제점이나 어려움,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고, 장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함.
- 주요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영향을 미치며, 홍수와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계수단을 줄이면 빈곤과 굶주림이 발생하고, 감소하는 자원을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전체 지역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긴급한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배가 되어 기후변화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음.

○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빈곤하거나 낮은 교육수준,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더 높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건강, 생계, 재난 위험, 이동, 정보 등과 같은 요인은 특정 취약성을 설명해줌.

○ 셋째,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여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며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후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장애인의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조취를 취할 때, 인권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장애를 포함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함

○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 기후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6.3%가 심각하다(매우심각+심각)다고 응답하였고,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97.5%(많은 영향+어느 정도 영향)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심각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더 많이 노력+노력하는 편)라는 응답이 34.6%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 탄소중립의 의미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한 인식정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장애인복지단체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남.

-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로는 사회전체의 참여유도,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걱정된다(매우걱정+다소걱정)고 응답함.
- 또한 기관이나 응답자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할 때 특별히 배제된다고 느끼는 영역으로는 SDGs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장애과 관련한 예산지원이나 별도 프로그램 부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음.
- 한편,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 다소 관심)는 비율이 21.0%에 불과하였고,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노력에서도 노력한다(많이 노력+노력)는 응답이 16.0%로 나타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으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방안 모색, 장애계의 기후적응능력 향상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지원 및 보호,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장애계의 참여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제화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 또한 탄소중립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에서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기후위기에 의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원회 및 관련기관 등에 장애를 포함하여 정책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장애계 대상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서 기관이나 단체,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도 있었으며 기후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 강화 촉진,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존중 강화, 접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의 용어를 우선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경험을 최소화 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정책개발이 촉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하여 인식수준을 높여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변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함. 따라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수준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둘째, 장애인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 등 장애계가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력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젠다를 형



성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장애인의 포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염두해 둔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정에 장애인 권리기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장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의 제13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고 하며 취약계층을 언급할 뿐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 해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참여 보장방안을 마련한 국가가 드물긴 하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언급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과 문제점, 특히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조하는 조치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조직(NGO)와 장애계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의 어려움과 장애계의 욕구사항을 제안하고 함께 아젠다를 형성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해야함.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¹⁾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UN 기후협약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당사국에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간 평균온도는 1.5℃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구 평균인 0.8~1.2℃ 보다는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작년 여름 발생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기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장애인의 경우, 갑자기 발생한 홍수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정보 접근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감염병 상황에서도 돌봄과 치료의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물 등은 장애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은 기후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심각하게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식량과 식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생태학적 변화를 촉진하며, 인구 이동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대기

1) 탄소중립이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함. 즉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임



오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간접적 영향 중 가장 크다. 전략, 운송 및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 연료 연소는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탄소배출의 주범이며,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 세계 700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체계 변화도 심각하다. 기온 상승과 기상 이변의 빈도 증가로 먹거리 생산량이 위협받고 있으며, 주요 작물의 전 세계 수확량 잠재력은 1981년과 2019년 사이에 1.8%~5.6% 감소하였다(Watts, Nick, et al., 2020).

장애인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은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기상악화로 인한 노후 건축물 피해를 입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방치되기도 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식자재 값 상승과 값싼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위주의 먹거리 선택으로 먹거리 위기와도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냉난방 문제로 인한 건강위기, 대기오염의 공기청정기 사용 등의 한계로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인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이 기후대응 정책에 참여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책의 실행 및 평가단계에도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법에서는 모든 수준의 기후 행동에 장애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장애인 포함 기후 정책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UN, 2020)

이에 2022년 ‘탄소중립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장애계 대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동 연구에서 장애계에 탄소중립, 녹색사회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 기후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장애계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사회 중심, 기관 및 단체 중심, 정부(중앙 및 지방)의 세 차원에서 대응방안과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를 확인하고,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이고 있는지,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

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에서의 차별 및 배제,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국내 현황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 정책에서 국가가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장애포괄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장애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포괄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립하였다.

첫째,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ESG 경영 지표에서 기후대응과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둘째, 장애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계의 기후위기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며,

셋째,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장애계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정책 수립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넷째, 장애인이 기후위기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주체별(개인, 기관, 정부 차원)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및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우선 기후위기 관련 국외 자료를 분석한다. UN 등 국제사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등 현황 분석을 진행한다.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계획(UNEP), UN OHCH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등에서 발간한 자료 및 사례들을 수집·분석한다.

둘째,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을 위한 국외 자료를 분석한다.



OECD-DAC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참여와 권한 부여에 관한 OECD-DAC 정책 마커(disability marker)’를 통해 장애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고,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안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UN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HRC)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인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후행동에 대한 장애를 포함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또한 이미 장애포괄적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가능한 원칙과 이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국내 기후위기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한국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 환경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등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환경 관련 정책과 사례들을 분석하여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적 내용이나 기후대응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를 확인한다. 또한 국내외 자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설문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고,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기후대응 정책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10년 당 0.2℃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더 이상 기후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과제라는 인식으로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을 ‘장애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장애인을 위한 추진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할 것이다.

2) 장애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장애계를 대상으로 녹색사회, 즉 환경과 관련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경험사례, 그리고 장애계의 기후대응 방안 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종사자 총 300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의 내용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1>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문항 수
응답자 일반현황	이름, 성별, 연령(출생연도), 소속기관, 장애유무(장애유형), 연락처(답례품 발송용)	7
기후변화 및 대응 인식	자연재해 심각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필요 이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6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식	탄소중립 인식, 환경규제 흐름 인식,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인식, 관련 정보 습득 경로, 탄소중립 추진에서 정부의 역할,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변화 예측,	10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환경문제 관심 정도, 환경문제 경험, 환경문제 대응(개인, 기관), 환경문제 대응 시 배제 경험	5
장애계 기후대응	장애계의 기후대응 관심정도, 기후대응 노력 정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애계 노력, 기후대응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기후대응 정책 수립 시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필요	16
계		44

3) 관련 전문가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실시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장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ESG 및 SDGs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연구기간 동안 1회에 걸쳐 진행하여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현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고려사항,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3. 연구추진 절차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I-1] 연구추진절차

II 기후대응 정책 현황

1. 기후위기 현황과 영향

1) 기후위기의 심각성

2021년 8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²⁾는 5차 보고서가 발표된 후 8년만에 'IPCC 제6차(AR6)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³⁾'를 발표했다. 6차 보고서는 과학적 기초에 근거해 현재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크게 1) 현재의 기후 상태, 2) 가능한 미래 기후, 3) 리스크 평가와 지역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4) 미래 기후변화 억제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재 기후상태 부분은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관측된 사실과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의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1.09도 상승했다. 또한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01~2018년 사이 0.20m 상승했고, 해수면 평균 상승 속도는 1901~1971년 사이 1.3mm/년 이지만 2006~2018년 사이는 3.7mm/년 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능한 미래 기후 부문은 새롭게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 시나리오)⁴⁾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081~2100년 전지구 지표면 온도는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SSP1-1.9)일 때 1.0~1.8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SSP5-8.5)일 때 3.3~5.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995~2014년 대비 2100년까지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2)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988년 11월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3) IPCC의 보고서는 제1실무그룹 보고서(과학적 근거), 제2실무그룹 보고서(영향, 적응 및 취약성), 제3실무그룹 보고서(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종합보고서(제1,2,3실무그룹 보고서 포함 종합평가)로 구분된다(2021. 기상

4)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SSP)는 AR6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시나리오로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정도와 함께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사용 등의 미래 사회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적용한 시나리오다.



배출하는 시나리오 일 때 0.28~0.55m,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 일 때 0.63~1.01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산업화 이전 시기 50년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고온(폭염 등)은 1.5도 지구온난화 도달 시에 빈도는 8.6배 증가하고, 강도는 2.0도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리스크 평가와 지역 적응을 위한 기후 정보 부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새롭게 기후영향인자(Climatic Impact-Drivers, CIDs)⁵⁾를 정의하고, 지역별 미래 기후영향인자 변화를 전망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염 등 더위 관련 기후영향인자가 증가하고, 호우와 홍수 또한 강화되고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넷째, 미래 기후변화 억제 부문은 탄소중립을 통한 누적 CO₂ 배출량 제한과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감축만이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850~2019년 누적된 CO₂ 배출량은 2390GtCO₂으로 AR5의 1890Gt((1861~1880)~2011년 누적)과 비교해 약 20% 정도 증가했다. 인간 활동에 의해 누적된 CO₂ 배출량과 지구온난화 사이에는 거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는 AR5 결과를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도달이 지구온난화를 안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메탄 배출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에어로졸 감소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고 대기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IPCC AR6차 평가보고서는 “인간의 영향이 대기, 해양 그리고 육지를 온난화 시켰음이 명백(unequivocal)하다”고 밝혔으며, 전례 없는 변화 규모를 밝혔다. 2013년 5차 보고서 이후 지난 5년간(2016~2020) 기온은 1850년 이후 가장 높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린란드 평균 빙상 유실 속도는 1992~1999년 기간 대비 약 6배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백만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 상승한 상태에 처해있다. 인간활동으로 만들어낸 본 위기 상황이 이례적인 폭우, 가뭄, 열대 태풍 및 복합적인 극한의 기상 현상(산불, 폭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후영향인자는 기후와 관련된 수치(평균값, 극값), 현상 등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정보로 평균기표온도, 평균강수량, 극한고온, 호우와 홍수 등 총 35개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Ⅱ-1> IPCC AR6와 AR5 보고서 주요 기후변화 요소 비교

비교요소	AR6 보고서(2021년 발간)	AR5 보고서(2013년 발간)
이산화탄소 농도 사례	최근 200만 년간 전례 없음	최근 80만 년간 전례 없음
전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2011~20년)	0.78도 상승(2003~12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1901년 대비)	0.20m 상승(2018년)	0.19m 상승(2010년)
2081~2100년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 상승 범위	1.0~5.7도(산업화 이전 대비)	0.3~4.8도(1986~2005년 대비)
2081~210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범위	0.28~1.02m 상승 (1995~2014년 대비)	0.26~0.82m (1986~2005년 대비)

2) 기후위기의 영향

(1) 일반적 영향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장마, 홍수, 폭염, 산불, 한파, 폭설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 세계적 피해를 가져왔다.

2022년 우리나라를 빗겨 간 초속 65m의 슈퍼 태풍 ‘난마돌’은 일본에 큰 피해를 줬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표면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 더 자주,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대형 홍수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고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2020년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울 면적의 80배를 태웠고, 미국 북서부에서는 매년 서울 면적의 50배가 넘는 산림이 산불로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가 대형 홍수, 강한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고, 인명피해를 넘어 농작물, 동물, 환경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세계적인 현실이다. 날씨 패턴을 바꾸고 폭염이나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조건을 유발하며, 홍수와 폭풍과 같은 자연 재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위와 빈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매주 한 건의 재해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Light for the World, 2020).

게다가, 기후위기는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홍수가 농업 생계 수단을 줄이면 빈



곤과 굶주림이 발생한다. 일단 가뭄이 물, 위생 및 위생(WASH)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면 질병이 확산된다. 감소하는 자원을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 재해로 인해 전체 지역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기후 변화는 또한 이동을 촉진한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상과학원(2018)의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와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2020)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전 지구 평균 대비 더 빠른 온난화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106년간(1912~2017년) 우리나라는 연평균기온이 1.8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 온난화(0.85도) 보다 빠른 속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과거 30년과 최근 30년을 비교했을 때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19일 길어진 반면, 겨울이 18일 짧아지고, 10년 간 서리일수와 결빙일수가 각각 3.2일, 0.9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8~2017년까지 최근 50년간 표층수온 온도는 1.23도 상승해 전 지구 평균(0.48도)보다 약 2.6배 빠르게 나타났고 해수면 평균은 약 2.97mm 상승하였다.

둘째,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및 강한 한파 빈도가 증가했다. 2020년 여름 최장 장마기간 기록으로 집중호우(강수량 851.7mm)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하천 범람과 침수·산사태 피해를 겪었다. 2022년 8월 초 서울 동작구에서는 1년 내릴 비의 1/3인 435mm의 비가 내렸다. 9월 초 11호 발생한 ‘힌남노’는 한라산을 지나며 1,059mm의 비를 내렸다(전의찬, 2022). 이상고온과 폭염으로 평년 대비 3도 이상 고온현상이 발생하고 매미나방, 대벌 등의 발생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양식생물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2009~2018년 자연재해로 인해 194명의 인명피해 및 20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재산피해에 따라 발생하는 복구비용은 3조 4천 억원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87.7%로 기상재해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

위와 같은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의 정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은 불평등의 상황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불평등의 관계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기후변화와 위기로 겪는 피해와 고통의 정도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의 크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고 큰 피해를 겪고 있다(박병도, 2019)고 한다. 온실가스의 약 70%가 세계 인구의 20% 이하인 선진국이 배출하면서, 그 피해는 온실가스의 약 3%만을 배출하는 저위도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이 겪고 있다(조천호, 2019: 202p)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를 매년 평가해 발표하는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German Watch)의 201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은 국가는 모두 아시아와 남미(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도미니카 등)이다. 모두 연간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누적 배출량 등 모든 지표에서 기후위기에 책임을 묻기 힘든 나라들이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극심한 변화와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기후위기 불평등의 모습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지리적 공간 안에 위치해 동일한 기후재난에 직면해도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그 재난의 영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2005년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의 피해 양상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비슷한 강도의 허리케인이 다른 지역에 준 것보다 훨씬 큰 피해를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겪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심각한 빈곤, 낮은 교육 수준과 취약한 교통 인프라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박병도, 2019: 119). 또한 허리케인 이후 인근 시체 안치소에 수용된 사망자의 총 64%가 65세 이상으로 집계되었다(박병도, 2019: 119). 이는 노인과 같이 생물학적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상황에 높은 위험에 처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도 다르지 않은 양상을 지니고 있다. ‘쪽방촌 사람들’로 상징되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적지만, 낮은 주거환경 탓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에 가장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김원, 2018). 농민, 기후변화에 민감한 노동자들에게도 기후변화는 치명적으로 작동한다. 봄철 냉해와 긴 장마, 태



풍 등으로 농사의 제약이 생겨 어려움을 경험한다. 건설 노동자들은 여름철 폭염으로 목숨을 잃거나, 장마나 강추위로 인해 일자리 문제를 겪어 경제적 수입을 잃기도 한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장애인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장애인의 세분화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장애가 있는 여성과 남성, 장애를 가진 소녀와 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특정 취약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① 건강: 일부 장애인은 극한 날씨로 인해 더 큰 건강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증의 척수 손상을 입은 일부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폭염에 더 취약하다.

② 생계: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정기적인 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60%가 고용된 것에 비해 장애인의 36%만이 고용되어 있다.

③ 재난 위험: 장애가 있는 여성과 남성, 장애를 가진 소녀와 소년들은 자연 재해 동안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이는 이미 정해진 장애 요인 때문이 아니라 비포용적인 준비 및 대응 계획에 따른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결과이다.

④ 이동: 지역사회 내 기후 적응이 실패할 경우, 내부 또는 국경을 초월한 이주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쉽게 또는 빠르게 이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⑤ 정보: 공공 지식 및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에도 적용되어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방해한다.

⑥ 역효과: 기후 변화는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결과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세탁 시설이 제한적인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 가능한 실명의 주요 원인인 트라코마가 더 쉽게 퍼진다.

2. 기후대응 정책

1) 국내 기후대응 정책

(1) 2050 탄소중립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9월 25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을 명시했고,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규정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10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 배출량 대비 기준 26.4%에서 40%로 1.5배 상향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결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2%로 2018년 기준 6.2% 보다 5배 증가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50년 71%로 증가하고, 화석연료는 일부 LNG를 제외하고 거의 사라지게 된다. 2030년에는 전체 차량 2천700만 대의 17%에 해당하는 450만 대의 무공해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2050년에는 전기차 80%, 수소차 17% 등 97%의 무공해차가 운행될 계획이다. 또한 2050년 모든 건물은 자체로 필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계획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수소차 생산량 세계 1위를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86번 과제)”과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87번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



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탈 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3번 과제)”를 선언했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 합리적 재정립, 기후변화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발표했다.

또한 2022년 7월 5일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추진’, 수소에너지 핵심기술 자립,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 ‘태양광 및 풍력 기술 개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 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제도 보완’ 등이다. 2022년 8월 30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에 따르면, 원전은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 등으로 NDC와 비교해 23.9%에서 32.8%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2%에서 21.5%로 축소될 예정이다.

(2)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가 조성을 위해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법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에서도 유사하게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물,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바로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수립하기 전까지는 기존 법에서 만들어졌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그대로 준용한다. 즉, 최근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는 명칭의 마지막 적응대책이고, 새로운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유효한 정책이 된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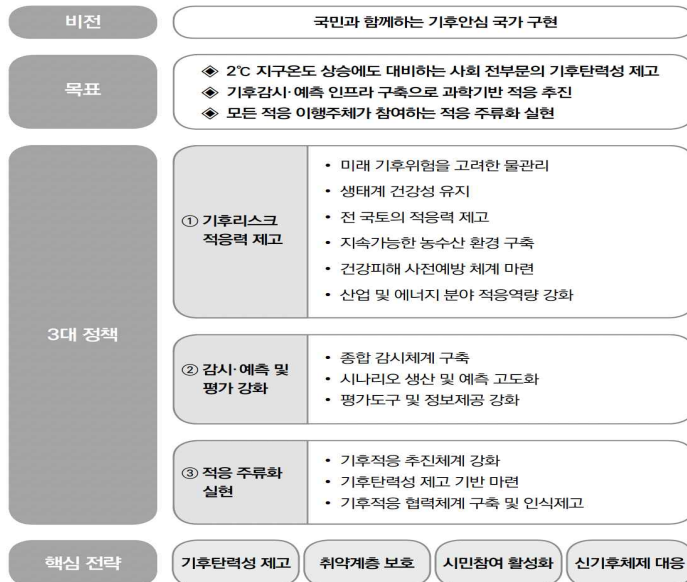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7조(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및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으로 본다.

법에 언급되어 있듯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5)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6)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2021년 발표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년)’은 3대 정책(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비전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1]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사업 비전체계도

그러나 2023년 6월 22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였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기후 감사·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둘째,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넷째,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이며 비전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비전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대한민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적응대책 지원 ◆ 기후재난 예방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하는 역량 제고 	
4대 정책	① 과학적 기후 감시·예측 및 적응 기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감시 체계 및 예측 강화 •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② 기후재난·위험을 극복한 안전사회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 •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 대비 건강피해 사전예방 강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주택·도시·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항만·해양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조성 • 생태계 안정성 유지
	④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 • 기후재난 대비 대응역량 제고 • 적응 거버넌스 강화

[그림 II-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비전체계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⁶⁾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측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6) 환경부 보도자료(2023. 6. 22.)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 m^3)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 m^3)까지 치수 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현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표 II-2> 재난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인프라 강화 주요추진과제

구 분	주요내용
❶ 하수도	대심도 빗물 터널 등 도시침수 저감 인프라 확충
❷ 하천	하천 홍수방어기준 설계빈도 강화 및 강변저류지 등 인프라 확충
❸ 도로·철도	미래 기후위험요인(폭우, 폭염 등)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 연구
❹ 항만	방파제방파호안 보강 11개항 17개소, 침수예상지역 6개항 9개소 정비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 지원도 제공한다.



<표 II-3> 6개 분야 기후재난 조기 경보 강화 주요 추진과제

추진과제	기대효과 / 주요지표
❶ AI 홍수예보 시스템('24)	3시간 전 예보 → 6시간 전 예보
❷ 돌발홍수 조기예보시스템('25)	소형 강우레이더 확대(2기 → 9기)
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24)	3일전 위험예측 → 7일~1개월전 위험예측
❹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25)	⇨ 산사태 특보(1~12시간), 예비특보(24~48시간)
❺ 연안재해 AI 예·경보 시스템('28)	예측주기 (3시간→30분), 정밀도 (시·도 → 읍·면·동)
❻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25)	('22) 60개 시군 → ('25) 155개 시군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취약 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의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청년단체)·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 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행동계획인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에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최초 실시('24), 취약계층 대책 가이드 라인 마련, 취약계층 냉·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와 기후대응 정책에 장애계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취약계층 중 장애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국외 기후대응 정책

(1)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장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 조치는 없지만, 이후의 국가 당사자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조금씩 언급하였고, 여성, 토착민,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기후 행동을 둘러싼 논의의 일부가 된 반면, 장애인들은 대부분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후 해수면 상승,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이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된 셈이다. 관련해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위험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정책 개발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은 기후 행동에 대한 목표 13을 포함한 모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cross issue이다.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준비 및 대응 활동에 장애를 포함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COVID-19 대유행 이후의 경제 회복은 녹색이어야 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주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질 뿐이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Leave No One Behind), 정부, 국제기구, 인도주의 및 개발 부문과 시민사회 운동은 장애를 포함한 대응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파리협정

1997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2015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 2016년 11월 4일 발효됐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면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 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장애 포괄적 기후 행동 COP26⁷⁾ 옹호 문서⁸⁾

이 문서는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맥길대학교(McGill

7) COP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의 당사자 회의를 의미하며, 26번째 회의를 의미함

8) IDA(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2021.10.). Disability Inclusive Climate COP26 Advocacy Paper. 내용을 번역·제시

University) 인권 및 법적 다원주의 센터 산하에서 활동하는 장애 포괄적 기후 행동 연구 프로그램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그 후 이 문서는 Global Action on Disability (GLAD Network) 산하에 설립된 장애 포괄적 기후 행동 워킹 그룹에 의해 검토되었고 국제 장애 동맹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본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① 기후 거버넌스에서 장애인의 배제와 그 결과

장애인이 전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자간 차원을 포함한 기후 행동은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반영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 2015년 파리협정 서문에는 기후 변화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그룹 중 하나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국내 수준의 계획에서 뿐만 아니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UNFCCC)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후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의 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대비 계획, 체계적인 차별, 만연한 빈곤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구호와 대응 노력에 뒤처져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태풍이나 산불과 같은 급속한 재해에서 가뭄, 온도 상승 및 해수면 상승과 같은 보다 점진적인 변화에 이르기까지)은 전 세계 장애인의 삶, 복지 및 생계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 변화의 결과는 특히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인, 실향민 및 기타 소외된 집단,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 지적 장애인, 심리 사회적 장애인 및 청각 장애인과 같은 대표성이 낮은 장애인 그룹을 포함한 교차 차별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더 심각하다.

농업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와 농촌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는 장애인은 식량 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영양 및 식품 생산 체인의 공정한 참여에 대한 기존 장벽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계속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기후 금융의 1.7%만이 소규모 농업 생산자에게 도달한다. 따라서 기후와 농업 의제를 연결하고 기후 재정을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농촌 지역사회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대



응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탄소 가격 책정 방식이나 탄소 집약적 제품 금지와 같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종종 장애인 공동체의 권리, 관점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며, 이러한 정책이 장애인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차별적인 비용과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인 기후 완화 정책은 장애인의 장벽을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따라서 세계가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훼손하기 보다는 향상시키고 보호하는 장애인 포괄적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왜 기후변화에 대한 장애인 권리접근이 필요한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은 특히 국가 당사자들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보유한 광범위한 인권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접근성, 독립적인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개인 이동성 등과 같은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권리도 포함한다. 또한, UNCRPD는 국가 당사자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법률, 정책 및 기타 의사결정 과정의 개발과 입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제4조 제3항). 또한 제11조에서는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 상황을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UNCRPD에 따른 이러한 특정 의무는 '당사자들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권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파리 협정 서문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의 영역에서 국가의 기존 법적 약속-장애인의 권리를 포함하여-에 대한 해석을 알려준다,"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및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들은 따라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장애를 포함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포함된다:

- 기후 변화가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접근법을 통해 불평등의 중첩된 형태를 인식
- 기후 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기후 완화 및 적응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 기후 변화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

- 장애인이 자신과 관련된 기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장애인이 기후 행동 또는 무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의 장애인들의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

③ 장애인이 기후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재난 위험 감소, 교육, 건축 및 산업 디자인과 같은 많은 분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적인 조직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더 접근하기 쉽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에 필수적인 기술, 지식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기후 변화의 맥락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이해하고 그러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장애인 포괄적 참여는 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투자이다.

- 모든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들은 기후를 의식한 결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운동으로서 내릴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효율적인 기후 적응과 기후 완화 전략에 의해 인류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
- 기후 완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재설계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해당 기반 시설의 접근성과 복원력이 향상된다.
- 기후 변화와 기후 행동의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과 스토리텔링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하고 합법적이며, 완전히 대표적인 정보가 의사 결정에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 특히 풀뿌리 수준의 장애인과 그들의 대표 조직은 기후 변화와 기후 활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정보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킹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 '녹색 정책'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장애인 및 그 대표 조직과의 협의는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④ 주요 우선순위 및 권장사항



(a) 주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 유엔 인권이사회, OHCHR의 권고 및 인권을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UNFCCC의 노력에 기초하여 국가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을 의미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특히 각 주에 지역,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 존중 및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i)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야심찬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집단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ii) UNFCCC 프로세스를 포함한 기후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의 의미 있고 정보에 입각한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iii) 모든 기후 완화 및 적응 정책의 설계, 개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 보호 및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iv) 다양한 기후 영향에 대한 장애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장애를 포함한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v) 법률 및 정책에서 토지, 기타 생산적 자원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기후 회복적인 식량 생산에서 장애인의 역할을 촉진한다;

(vi) 장애인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탈탄소 노력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를 포함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vii)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촉진하는 모든 이니셔티브에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viii) 여성, 어린이, 원주민, 실향민, 소수민족, 노인 장애인이 직면한 여러 장벽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포괄적 기후 행동에 대한 cross issue을 채택합니다(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지적 장애인, 심리 사회적 장애인, 청각 장애인과 같이 대표성이 낮은 장애인 그룹 포함)

(b) 기증자

(i) 기후 적응 및 기후 완화 정책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참여시키는 격차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의 헌신을 보장한다;

(ii) 장애인 단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애인의 기후 행동 참여와 포함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전용 기후 금융을 목표로 한다;

(iii) 주류 기후 조치가 접근 가능하고, 장애 권리를 훼손하지 않으며, 설계, 구현 및 모니터링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조달 프로세스에 적절한 의무와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c) 민간 부문의 경우:

(i) 기후공약의 설계 및 시행 시 접근성을 포함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ii) 장애인이 기후 행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유의 기후 공약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

(d) 기후 NGO를 포함한 시민 사회

(i) 주류 기후 활동에 장애인이 포함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에게 글로벌, 지역, 국가 및 지역 기후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ii) 청소년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기후운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 및 성장 기회를 창출한다;

(iii) 주류 기후 운동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조직과의 연결과 협력을 우선시한다

(e) 장애인 단체(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PD)

(i) 관련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후 행동 메시지를 확대해나간다;

(ii) 기후 운동에서 보다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장애의 포용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의 인식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iii) 다양한 수준의 기후 행동의 포괄성과 접근성을 위한 기후 행위자 및 옹호자들과의 연결을 확립한다

III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 인식 수준 및 대응 방안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장애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정도를 확인하고,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울이고 있는지, 환경 및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에서의 차별 및 배제, 기후위기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조사대상

장애인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더욱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즉,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태풍, 산불 등의 급속한 재해상황과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의 점진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따른 영향은 장애인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각종 대응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 관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장애인에게 또 다른 장벽을 생성하고 중첩적인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IDA, 2021).

위와 같은 상황에 ‘장애인이 기후 완화 및 적응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의 주체로’ IDA는 민간 부문, 기후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 장애인 단체 등을 제시하고 있다. IDA가 제시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의 기후 운동 참여 촉진, 주류 기후 활동에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애인 조직과의 연결, 구성원(장애인)의 기후 인식과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등을 주요한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IDA, 2021). 이러한 논지에 근거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옹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련 종사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 총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이 기관들



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환경문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생산활동으로 인해 일회용품 생산·사용, 환경 정책에 따른 경영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며, 장애인단체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을 본 조사의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표 III-1> 조사대상자 수

비고	장애인복지관 ⁹⁾ 종사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¹⁰⁾ 종사자	장애인단체 ¹¹⁾ 종사자	계
기관 수	250개소	773개소	36개소	1,059개소
비율	23.6%	73.0%	3.4%	100.0%

총 조사참여자 수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총 1,059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300명으로 제한하며, 조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조사참여도가 낮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요청하여 설문참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또한 질적연구를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기후위기 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추진현황, 장애인 배제 또는 포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장애포괄적 기후위기 정책 수립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총 8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참여자는 2022년 ‘탄소중립 녹색사회를 위한 장애계 대응 방안 연구’에 참여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ESG 관련 전문가, 장애계 전문가를 우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조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야(동일 또는 유사기관)의 다른 전문가를 섭외

9) 장애인복지관협회(www.hinet.or.kr) ‘장애인복지관 현황’ (2023.3.13. 검색기준)

1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1년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현황(2021.12.30.기준)

11)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사단재단특수)’(2022.9.1.기준)

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3) 조사방법 및 내용

설문조사는 조사참여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문을 조사대상 기관에 발송하여 연구목적과 내용,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조사기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석자 모집을 위해 사전에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가 가능한 전문가에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자를 모집한다. 단,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에 다른 전문가를 추천을 요청하여 참여가 가능한 인원을 추천받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별 모집 방법은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대상자 모집 방법

구분	목표 수집량	홍보 대상기관 수	수집(모집)방법	비고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100명	250개소	-전국 장애인복지관 대상 공문 발송 -복지관 종사자(기획·운영지원팀 또는 지역연 계팀) 중 조사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	장애인 복지관 협회 협조 요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종사자	180명	773개소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공문 발송 -시설 종사자(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중 조사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	직업재 활시설 협회 협조 요청
장애인 단체 종사자	20명	36개소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단체 대상 공문 발송 -단체 종사자 중 조사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8명	8명	-전문가 소속 기관에 공문 발송 -2022년 연구의 전문가 간담회 위원으로 참 여한 위원 중 참여 희망하는 전문가	
합계	308명	308명		

설문조사 문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후



변화 및 대응 인식,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식,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장애 계 기후대응, 그리고 응답자 일반현황으로 구성하였고,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3> 설문조사 주요 질문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항수
응답자 일반현황	이름, 성별, 연령(출생연도), 소속기관, 장애유무(장애유형), 연락처(답례품 발송용)	7
기후변화 및 대응 인식	자연재해 심각정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대응 필요 이유,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6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식	탄소중립 인식, 환경규제 흐름 인식, 탄소중립 추진 전략 인식, 관련 정보 습득 경로, 탄소중립 추진에서 정부의 역할,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변화 예측,	10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환경문제 관심 정도, 환경문제 경험, 환경문제 대응(개인, 기관), 환경문제 대응 시 배제 경험	5
장애계 기후대응	장애계의 기후대응 관심정도, 기후대응 노력 정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애계 노력, 기후대응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기후대응 정책 수립 시 정부/지자체/민간의 역할 필요	16
계		44

2. 조사결과

1) 기본 정보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 보면, 남자 33명(40.7%) 보다 여자 48명(59.3%)이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III-4> 응답자의 성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남자	33	40.7
여자	48	59.3
전체	81	100.0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81명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29명(3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명(32.1%), 장애인복지단체 24명(29.6%) 순으로 참여하였다.

<표 III-5>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장애인복지관	29	35.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6	32.1
장애인복지단체	24	29.6
기타	2	2.5
전체	81	100.0

2)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혹한 등 이상기후, 홍수·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본 결과,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심각하다(56명, 69.1%), 심각한 편이다. 22명



(27.2%)으로 전체 96.3%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심각하다	56	69.1
심각한 편이다	22	27.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3.7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0.0
전체	81	100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39명(48.1%),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0명(49.4%)으로 전체의 97.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7>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많은 영향을 미친다	39	48.1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0	49.4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	0.0
전체	81	100.0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1순위는 ‘현재 기후변화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7명(45.7%), 2순위 ‘현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0명(41.7%), 3순위 ‘세계 경제·시장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8>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한 이유_우선순위 3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	-----	-----	-----	----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9	11.1	7	9.7	19	27.1	35	15.7
세계 경제·시장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탄소중립 미이행시 투자, 수출 제약)	4	4.9	7	9.7	25	35.7	36	16.1
현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7	45.7	30	41.7	4	5.7	71	31.8
미래세대(자녀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30	37.0	23	31.9	17	24.3	70	31.4
산업 및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1	1.2	5	6.9	5	7.1	11	4.9
기타	0	0.0	0	0.0	0	0.0	0	0.0
전체	81	100.0	72	100.0	81	100.0	223	100.0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87.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9>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우리나라 책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책임이 크다	25	30.9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46	56.8
별로 책임이 크지 않다	8	9.9
전혀 책임이 없다	1	1.2
무응답	1	1.2
전체	81	100.0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 질문하여본 결과,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는 편이다 44명(54.3%),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26명(32.1%), 상대적으로 노력을 매우 덜



하고 있다 9명(11.1%),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2명(2.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상대적으로 노력을 매우 덜 하고 있다	9	11.1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는 편이다	44	54.3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26	32.1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2	2.5
전체	81	100.0

최근 국가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음 중 어떤 구간에 속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질문하여본 결과, 중상위권(배출량이 많다) 65.4%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표 III-11>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최상위권 (배출량 매우 많다)	11	13.6
중상위권 (배출량 많다)	53	65.4
중하위권 (배출량 적다)	16	19.8
최하위권 (배출량 매우 적다)	1	1.2
전체	81	100.0

3) 기후변화 대응 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인식

응답자에게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45.7%,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25명(30.9%),

잘 알고 있다 13명(16.0%), 전혀 모른다 6명(7.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2>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13	16.0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37	45.7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25	30.9
전혀 모른다	6	7.4
전체	81	100.0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해서 기관유형별로 분석하여보면, 장애인복지관은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12명(41.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어느정도 아는 편이다 14명(53.8%), 장애인복지단체는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12명(50.0%)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1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3> 기관유형별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기타	전체
잘 알고 있다	3	3	5	2	13
	10.3	11.5	20.8	100.0	16.0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11	14	12	0	37
	37.9	53.8	50.0	0.0	45.7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12	7	6	0	25
	41.4	26.9	25.0	0.0	30.9
전혀 모른다	3	2	1	0	6
	10.3	7.7	4.2	0.0	7.4
전체	29	26	24	2	81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698$ (df=9 p=.100)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34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29명(35.8%),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31명(33.3%), 잘 알고 있다 12명(14.8%), 전혀 모른다 9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환경 규제 강화되는 흐름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12	14.8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29	35.8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31	38.3
전혀 모른다	9	11.1
전체	81	100.0

기관 유형별로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15명(5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12명(46.2%), 장애인복지단체는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10명(41.7%)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335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5> 기관유형별 환경 규제 강화되는 흐름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기타	전체
잘 알고 있다	3	3	5	1	12
	10.3	11.5	20.8	50.0	14.8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6	12	10	1	29
	20.7	46.2	41.7	50.0	35.8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15	9	7	0	31
	51.7	34.6	29.2	0.0	38.3
전혀 모른다	5	2	2	0	9
	17.2	7.7	8.3	0.0	11.1

전체	29	26	24	2	81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0.200$ (df=9 p=.335)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명칭 정도만 들어본 적 있다 38명(46.9%),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26명(32.1%), 전혀 모른다 13명(16.0%), 잘 알고 있다 4명(4.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16>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대한 인식 여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잘 알고 있다	4	4.9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26	32.1
명칭 정도만 들어본 적 있다	38	46.9
전혀 모른다	13	16.0
전체	81	100.0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소식 및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TV’ 49명(25.8%)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등 포털 뉴스’ 35명(18.4%), ‘유튜브’ 34명(17.9%),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23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관련 소식 및 내용을 접하게 된 경로 (모두 선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TV	49	25.8
라디오	14	7.4
신문/간행물	18	9.5
유튜브	34	17.9
인스타그램	9	4.7



네이버 등 포털 뉴스	35	18.4
페이스북	8	4.2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23	12.1
전체	190	100.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 44명(54.3%)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산업계, 국민 포함 사회 전체의 참여 유도 20명(24.7%),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9명(11.1%),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산업·계층·노동·지역 보호 8명(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부 역할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	44	54.3
산업계, 국민 포함 사회 전체의 참여 유도	20	24.7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계층·노동·지역 보호	8	9.9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9	11.1
전체	81	100.0

기관 유형별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산업계, 국민 포함 사회 전체의 참여 유도’가 14명(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이 11명(37.9%) 순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이 16명(6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5명(19.2%)이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 16명(66.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계층·노동·지역 보호’와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이 각각 3명(12.5%)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유의확률이 .039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표 III-19> 기관유형별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부 역할

(단위 : 명, %)

구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기타	전체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	11 (37.9)	16 (61.5)	16 (66.7)	1 (50.0)	44 (54.3)
산업계, 국민 포함 사회 전체의 참여 유도	14 (48.3)	3 (11.5)	2 (8.3)	1 (50.0)	20 (24.7)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계층·노동·지역 보호	3 (10.3)	2 (7.7)	3 (12.5)	0 (0.0)	8 (9.9)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1 (3.4)	5 (19.2)	3 (12.5)	0 (0.0)	9 (11.1)
전체	29 (100.0)	26 (100.0)	24 (100.0)	2 (100.0)	81 (100.0)

$\chi^2=17.674$ (df=9 p=.039)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세부항목별로 응답자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작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 47명(58.0%)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하였고,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44명(54.3%), ‘이해당사자간 조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 41명(50.6%),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44명(54.3%)이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은 매우 걱정된다와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가 각각 40명(49.4%)로 응답하였고,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변화’는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42명(41.9%)으로 응답되었다.

즉 대체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

(단위 : 명, %)

세부 항목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	47 (58.0)	32 (39.5)	2 (2.5)	0 0.0	81 (100.0)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	40 (49.4)	40 (49.4)	1 (1.2)	0 0.0	81 (100.0)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44 (54.3)	33 (40.7)	4 4.9	0 0.0	81 (100.0)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	41 (50.6)	36 (44.4)	3 3.7	1 1.2	81 (100.0)
저탄소 산업전환**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 변화	34 (42.0)	42 (51.9)	4 4.9	1 1.2	81 (100.0)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44 (54.3)	34 (42.0)	3 3.7	0 0.0	81 (100.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에 대하여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걱정된다는 응답이 28명(9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5명(96.2%), 장애인복지단체 24명(100.0%)가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19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1> 기관유형별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복지관	14 (48.3)	14 (48.3)	1 (3.4)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 (46.2)	13 (50.0)	1 (3.8)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9 (79.2)	5 (20.8)	0 (0.0)	0 (0.0)	24 (100.0)
기타	2	0	0	0	2

	(100.0)	(0.0)	(0.0)	(0.0)	(100.0)
전체	47 (58.0)	32 (39.5)	2 (2.5)	0 (0.0)	81 (100.0)

$\chi^2=8.714$ (df=6 p=.190)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에 대해서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단체의 모든 응답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5명(96.2%)이 걱정된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181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2> 기관유형별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복지관	15 (51.7)	14 (48.3)	0 (0.0)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 (30.8)	17 (65.4)	1 (3.8)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5 (62.5)	9 (37.5)	0 (0.0)	0 (0.0)	24 (100.0)
기타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전체	40 (49.4)	40 (49.4)	1 (1.2)	0 (0.0)	81 (100.0)

$\chi^2=8.875$ (df=6 p=.181)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에 대해서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걱정된다는 응답이 29명(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5명(96.2%), 장애인복지단체 21명(87.5%)가 응답하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528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3> 기관유형별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	------------	-------------------	-------------------	-------------------	----



장애인복지관	17 (58.6)	12 (41.4)	0 (0.0)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 (50.0)	12 (46.2)	1 (3.8)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3 (54.2)	8 (33.3)	3 (12.5)	0 (0.0)	24 (100.0)
기타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전체	44 (54.3)	33 (40.7)	4 (4.9)	0 (0.0)	81 (100.0)

$\chi^2=5.123$ (df=6 p=.528)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걱정된다는 응답이 28명(9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4명(92.3%), 장애인복지단체 23명(95.8%)가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633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4> 기관유형별 이해당사자 간 조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복지관	16 (55.2)	12 (41.4)	1 (3.4)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 (42.3)	13 (50.0)	2 (7.7)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2 (50.0)	11 (45.8)	0 (0.0)	1 (4.2)	24 (100.0)
기타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전체	41 (50.6)	36 (44.4)	3 (3.7)	1 (1.2)	81 (100.0)

$\chi^2=7.040$ (df=9 p=.633)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 변화'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걱정된다는 응답이 27명(9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4명(92.3%), 장애인복지단체 23명(95.8%)가 응

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582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5> 기관유형별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 변화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복지관	12 (41.4)	15 (51.7)	2 (6.9)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 (34.6)	15 (57.7)	2 (7.7)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1 (45.8)	12 (50.0)	0 (0.0)	1 (4.2)	24 (100.0)
기타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전체	34 (42.0)	42 (51.9)	4 (4.9)	1 (1.2)	81 (100.0)

$\chi^2=7.535$ (df=9 p=.582)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은 걱정된다는 응답이 27명(9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5명(96.2%), 장애인복지단체 24명(100.0%)가 응답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유의확률이 .129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6> 기관유형별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단위 : 명, %)

구분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전체
장애인복지관	14 (48.3)	13 (44.8)	2 (6.9)	0 (0.0)	29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38.5)	15 (57.7)	1 (3.8)	0 (0.0)	26 (100.0)
장애인복지단체	18 (75.0)	6 (25.0)	0 (0.0)	0 (0.0)	24 (100.0)
기타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전체	44 (54.3)	34 (42.0)	3 (3.7)	0 (0.0)	81 (100.0)

$\chi^2=9.893$ (df=6 p=.129)



4)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응답자에게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질문하여 본 결과, 다소 관심이 있는 편이다 52명(64.2%), 매우 관심이 많다 14명(17.3%) 80% 이상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7>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관심 없다	1	1.2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14	17.3
다소 관심이 있는 편이다	52	64.2
매우 관심이 많다	14	17.3
전체	81	100.0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가 47명(5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 12명(14.8%),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증가 9명(11.1%),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환 증가 8명 (9.9%) 등의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되는 문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증가	9	11.1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환 증가	8	9.9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	12	14.8
장애인 일자리, 펜션은 일자리 감소 문제	5	6.2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	47	58.0

전체	81	100.0
----	----	-------

응답자가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30명(37.0%)이 가장 높았고, ‘홍수, 가뭄,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무더위, 강추위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 요금 지출 증가’가 각각 24명(29.6%)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29>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홍수, 가뭄,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24	29.6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30	37.0
무더위, 강추위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 요금 지출 증가	24	29.6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3	3.7
전체	81	100.0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를 생각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재사용 봉투나 다회용기 등을 사용’ 이 60명(30.0%)으로 가장 높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발생 감소 노력’ 51명(25.5%),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와 ‘친환경 제품 등 녹색 소비’는 각각 25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 생각하여 취한 행동 (모두선택)

(N=81,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	25	12.5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재사용 봉투나 다회용기 등을 사용	60	30.0
철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발생 감소 노력	51	25.5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24	12.0
친환경 제품 등 녹색 소비	25	12.5
환경교육이나 지역 공동체의 환경운동 등에	14	7.0



구분	빈도	비율
참여		
기타	1	0.5
전체	200	100.0

응답자의 기관에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텀블러, 다회용컵 이용’ 64명(35.8%)이 가장 높았고, ‘전자문서나 파일을 활용’ 27명(15.1%), ‘친환경 제품 구매’ 22명(12.3%),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9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기관에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모두선택)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텀블러, 다회용컵 이용	64	35.8
무공해 또는 전기차 사용	5	2.8
친환경 제품 구매	22	12.3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9	10.6
전자문서나 파일을 활용	27	15.1
기관 소속 직원이나 이용자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시	15	8.4
ESG 경영	18	10.1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9	5.0
전체	179	100.0

기관이나 응답자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할 때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배제되었다고 느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1순위는 ‘장애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부족할 때 <인식>’ 30명(37.0%), 2순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교육에 참여할 때 <교육>’ 19명(30.6%), 3순위는 ‘기후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참여 <접근성>’ 20명(35.7%)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배제됨_우선순위 3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장 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접근성>	16	19.8	12	19.4	11	19.6	39	19.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교육에 참여할 때 <교육>	19	23.5	19	30.6	16	28.6	54	27.1
장애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이 부족할 때 <인식>	30	37.0	15	24.2	9	16.1	54	27.1
기후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참여 <접근성>	15	18.5	16	25.8	20	35.7	51	25.6
기타	1	1.2	0	0.0	0	0.0	1	0.5
전체	81	100.0	62	100.0	56	100.0	199	100.0



5) 장애계의 기후대응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 수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조금 관심 있다 46명(5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관심이 없다 18명(22.2%), 다소 관심이 있다 14명(17.3%), 매우 관심이 있다 3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 수준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혀 관심이 없다	18	22.2
조금 관심 있다	46	56.8
다소 관심이 있다	14	17.3
매우 관심이 있다	3	3.7
전체	81	100.0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에 대하여 장애계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 질문하여본 결과, 노력을 덜 하는 편이다 52명(64.2%)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고, 노력을 매우 덜 하고 있다 16명(19.8%), 더 노력하는 편이다 12명(14.8%),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1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노력 정도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노력을 매우 덜 하고 있다	16	19.8
노력을 덜 하는 편이다	52	64.2
더 노력하는 편이다	12	14.8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1	1.2
전체	81	100.0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에 대하여 우선 3순위

를 질문하여 본 결과, 1순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23명(28.4%)이며, 2순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21명(29.6%), 3순위는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 방안 모색’ 19명(28.8%) 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_우선순위 3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녹색사회, 기후대응 관련한 교육	8	9.9	6	8.5	8	12.1	22	10.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23	28.4	7	9.9	16	24.2	46	21.1
녹색사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구축	9	11.1	11	15.5	3	4.5	23	10.6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15	18.5	21	29.6	15	22.7	51	23.4
장애계의 기후적응능력 향상 노력	11	13.6	17	23.9	5	7.6	33	15.1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 방안 모색	14	17.3	9	12.7	19	28.8	42	19.3
기타	1	1.2	0	0.0	0	0.0	1	0.5
전체	81	100.0	71	100.0	66	100.0	218	100.0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우선 3순위를 질문하여 본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난 1순위는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31명(38.3%), 2순위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24명(32.9), 3순위는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17명(23.6%)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우선순위
3순위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장애계와 기후대응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13	16.0	3	4.1	10	13.9	26	11.5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계의 참여 보장	21	25.9	9	12.3	9	12.5	39	17.3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31	38.3	24	32.9	6	8.3	61	27.0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7	8.6	16	21.9	17	23.6	40	17.7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 지원 및 보호(예 : 편의시설, 안내방송 등)	9	11.1	18	24.7	15	20.8	24	18.6
탄소중립, 녹색사회 기본법에 장애관련 조항 추가	0	0.0	3	4.1	15	20.8	18	8.0
전체	81	100.0	73	100.0	72	100.0	226	100.0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보았다.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전세계적 기후대응 방향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추진’ 79명(97.6%)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 수립’ 79명(97.5%), ‘국내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에 장애인 참여 근거 마련’ 80명(98.8%),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홍보’ 80명(98.8%)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사업 개발 및 추진’ 78명

<표 III-37>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할 일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	전체
전세계적 기후대응 방향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추진	0 (0.0)	2 (2.5)	45 (55.6)	34 (42.0)	81 (100.0)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 수립	0 (0.0)	2 (2.5)	43 (53.1)	36 (44.4)	81 (100.0)
국내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에 장애인 참여 근거 마련	0 (0.0)	1 (1.2)	43 (53.1)	37 (45.7)	81 (100.0)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홍보	0 (0.0)	1 (1.2)	45 (55.6)	35 (43.2)	81 (100.0)

(96.3%),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79명 (97.5%),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80명(98.8%),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 탄소중립 실천 관련 교육 실시’ 80명(98.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8>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
(단위 :명, %)

구분	전혀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	전체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사업 개발 및 추진	1 (1.2)	2 (2.5)	48 (59.3)	30 (37.0)	81 (100.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1 (1.2)	1 (1.2)	41 (50.6)	38 (46.9)	81 (100.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0 (0.0)	1 (1.2)	50 (61.7)	30 (37.1)	81 (100.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 탄소중립 실천 관련 교육 실시	0 (0.0)	1 (1.2)	48 (59.3)	32 (39.5)	81 (100.0)

세 번째, 민간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79명



(87.5%),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녹색운동, 탄소중립 실천’ 79명(97.6%), ‘녹색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80명(98.8%)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II-39> 기후대응 정책 수립시 장애인 배제되지 않도록 민간기관에서 해야할 일
(단위 : 명, %)

구분	전혀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하 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	1 (1.2)	2 (2.5)	49 (60.5)	29 (35.8)	81 (100.0)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1 (1.2)	1 (1.2)	50 (61.7)	29 (35.8)	81 (100.0)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녹색운동, 탄소중립 실천	0 (0.0)	2 (2.5)	48 (59.3)	31 (38.3)	81 (100.0)
녹색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0 (0.0)	1 (1.2)	47 (58.0)	33 (40.7)	81 (100.0)

3. 소결

본 설문조사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 동의한 81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96.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은 응답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절반 이상(64.2%)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일상생활에 97.5%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은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에 대해 절반 이상이 우려하고 있었고, 직접 경험한 환경문제는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37.0%)가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문

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재사용 봉투나 다회용기 등을 사용’, ‘철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발생 감소 노력’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텀블러, 다회용컵 이용’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바구니 이용, 분리수거, 텀블러 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 관련 내용 및 소식은 TV(25.8%)와 네이버 등 포털뉴스(18.4%), 유튜브(17.9%)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50.6%로 절반 이상이 응답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해서 명칭 정도만 들어봤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는 62.9%로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흐름보다 국내의 정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실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응답자의 87.7%가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배출량이 많은 편(65.4%)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덜 하고 있는 편(54.3%)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절반 이상(54.3%)이었고,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실현가능한 전략 수립과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74.1%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후대응을 위한 노력은 84.0%가 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장애계에서 필요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



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28.4%)’가 가장 높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29.6%)’,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 방안 모색(28.8%)’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장애계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개발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이었다. 상용화는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으로 수립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정책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 및 모니터링,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응답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기관에서는 장애계의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녹색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필요하다고 하였다.

IV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1. 장애포괄 개념

1) 장애포괄의 의미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포괄(Inclusion)'을 "그룹이나 구조물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상태"로 정의한다. 또한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만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contribution)를 중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pro-poor approach이라 한다.

국제 장애 및 개발 컨소시엄(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 IDDC)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포괄적 개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포용적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 포괄(inclusion)과 개발(development)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 포괄은 과정이자 목표이다.
- 다양성은 삶의 사실이며, 차이는 정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차이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보편적, 일부 문화 및 맥락에 특화된 요인일 수 있다.
- 포괄은 사회가 차이를 줄이고 차별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아닌 사회를 문제로 보고 있다.
- 포괄을 달성하려면 트윈 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배제(주장)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에 초점을 맞춘다.
- 역량강화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제된 그룹에게 초점을 맞춘다.
- 포괄은 사회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협력과 네트워크는 포용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 그러므로 포괄적 개발은 모든 소외/배제 집단이 개발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2019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에서는 2018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발표하면서 DAC 정책마커(policy marker) 중 ‘장애인 포용성 및 역량강화(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 마커에 대해 20개국의 자발적 보고를 받아 그 결과를 함께 공개하였다.

‘장애마커(Disability Marker)’는 각국의 ODA 활동에 있어 원조 프로젝트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또는 포용성 강화와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0점(해당없음), 1점(간접목적), 2점(직접목적)의 점수로 부여한다. 장애마커 부여는 자발적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에 20개 국가가 2018년 ODA 자금 흐름 중 장애마커를 부여하여 최초로 보고하였다.

CRS 목적코드를 살펴보면 장애(인)는 ‘16010(사회/복지 서비스)’ 및 ‘15160(인권)’ 등 두 목적코드 상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장애인은 개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인권 실현에 매우 높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SDGs에서도 총 7개의 세부목표(targets)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표 IV-1> DAC CRS 코드 및 SDGs 내 장애(인) 명시 현황

구분	해당 부분	세부 내용
DAC CRS code (2)	16010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법률과 행정;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사회적 안전망과 기타 사회적인 사업계획; 노인, 고아, 장애인, 거리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적 개혁; 비특정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소비자 보호 포함)
	15160 (인권)	1. 전세계, 지역, 국가, 지방에 걸쳐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정의된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전문 인권 기구 또는 인권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활동; 국제 인권 공약을 국내 법률로 승인; 보고 및 후속 조치; 인권 관련 토론 2. 인권 운동가 인권 NGOs; 인권 변호와 운동; 공

구분	해당 부분	세부 내용
		공 대상의 인권 교육에 인식 증진 3.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프로그램(예: 어린이, 장애인, 이민자, 민족, 종교, 언어, 성별 소수자, 원주민 및 계급 제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인신매매 및 고문 피해자)(평화 유지활동 내에서의 인권 관련 활동은 15230 사용)
SDGs 세부목표 (7)	4.5 (평등한 교육접근성)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4.a (장애인·성·인·지·적 학습환경)	아동·장애·성·인·지·적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
	8.5 (동일가치 동일임금)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10.2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성)	2030년까지 나이, 성,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강화·증진
	11.2 (안전한 교통접근성)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7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17.18 (세분화된 데이터 이용가능성)	소득,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이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세 분화되는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 등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

*출처: OECD(2018); 김지현(2016).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래 표는 2019년 12월 최초 취합 및 발표된 DAC 장애마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의 ODA 활동상에서의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적 사업 운영 현황



을 살펴본 것이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총 16개국이 모두 장애마커 점수를 보고하였다. 그 중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폴란드는 2018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장애 정책마커 보고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ODA 사업에 있어 장애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장애분야에 대한 정책마커 구분을 시도하였으나, 오스트리아는 장애 직접목적(2)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곧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ODA 사업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 슬로바키아는 장애분야에 대한 미분류 및 해당없음(0)으로만 사업을 보고함으로써 해당년도 장애특정적 사업 및 장애주류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표 IV-2> 공여국별 2018년도 사업 대상 장애마커별 지원 규모 보고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장애마커					마커 1, 2	
	0	1	2	미분류	총합계	합산	비중
영국	7,966.50	2,986.73	54.44002	1,369.46	12,377.14	3,041.17	71.99
스웨덴	1,699.64	593.5805	5.511501	1,654.64	3,953.37	599.092	14.18
이탈리아	136.5329	83.57023	32.21395	1,995.92	2,248.23	115.7842	2.74
아일랜드	384.4703	108.3451	0.236044	37.27051	530.32202	108.5812	2.57
한국	1,727.27	43.65707	28.87649	106.7969	1,906.60	72.53356	1.72
노르웨이	3,211.88	47.70027	15.37923	0	3,274.96	63.0795	1.49
호주	2,284.48	48.7977	11.23111	208.8347	2,553.35	60.0288	1.42
스위스	1,487.53	21.29284	8.591716	853.0394	2,370.46	29.88456	0.71
프랑스	780.867	7.57416	21.79649	8,732.51	9,542.74	29.37065	0.7
스페인	916.4529	16.15497	5.229174	107.7291	1,045.57	21.38415	0.51
핀란드	42.37199	11.96294	9.008694	431.0073	494.35094	20.97164	0.5
아이슬란드	43.49333	17.61662	0.014778	0	61.124728	17.6314	0.42
캐나다	853.2379	12.58987	0.471672	2,636.17	3,502.47	13.06154	0.31
일본	12,307.63	8.529351	0.761043	967.7115	13,284.63	9.290395	0.22
체코	19.63368	6.82887	1.149035	72.55588	100.16746	7.977905	0.19

공여국	장애마커					마커 1, 2	
	0	1	2	미분류	총합계	합산	비중
오스트리아	15.86734	5.216084	0	470.7273	491.81073	5.216084	0.12
뉴질랜드	456.813	2.672098	1.986377	0	461.47151	4.658474	0.11
폴란드	260.2281	1.767342	2.820321	0	264.81578	4.587663	0.11
그리스	4.530436	0	0	34.11031	38.640749	0	0
슬로바키아	0.6663	0	0	31.68915	32.35545	0	0
총합계	34,600.10	4,024.59	199.718	80,472.30	119,296.70	4,224.31	3.54

3) 인권기반의 장애포괄적 접근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이론적 원칙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때마다,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장애 포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의 점진적 실현은 인권기반 접근의 자연스러운 차원이다.

다음 사항은 인권 기반 장애 접근법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Small steps count : 수세기 동안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종종 장애인의 사회로의 완전한 포괄을 불가능한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낙담하지 말고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가장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다.

② Given limited resources, trust your creativity : 종종 장애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 환경에서는 간단한 솔루션이 중요하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직원들이 포괄적인 업무 관행을 위한 상식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장려한다.

③ Involve the leadership of your organisation :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의무수행을 강화하여 권리를 주장할 의무와 권리보유자(duty-bearers)를 강화하는 것이다. 리더스태프에게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게 하고 본보기로 이끌도록 독려한



다.

④ Le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p you : 장애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장애인을 다루는 실수를 피하고 싶어 '잘못된 일'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생각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재빨리 추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참여시켜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⑤ Celebrate your successes :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위해서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가정에 직면해 왔으며, 많은 실무자들은 오랜 기간 메인스트림 이슈의 맥락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시행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조직이 장애 포함을 위해 취하고 있는 작은 조치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다른 조직과 공유할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발 조직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권기반 접근은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포괄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고 있다.

<표 IV-3> 장애포괄적 개발에 핵심적 인권규칙 적용 방안

영역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에 대한 존경 강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은 어느 정도인지, 국가 법률, 정책 및 전략은 어느 정도인지, 공공 및 민간 기관은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실제로 존중하는지, 직장 직원은 장애인 및/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보이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는가?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등에 관한 정책이 있는가? 장애인 또는/그 밖의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가? 등
접근성 정의 및 당면 과제 보장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이 건물, 급수, 위생 및 운송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합리적 가격의 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영역	구분	세부내용
비차별, 기회의 균등과 성평등 강조	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서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을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접근성과 보편적 설계를 지침 원칙으로서 준수하고 촉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등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장애인이 활동과 행사에서 눈에 보이는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을 취업면접에 초대하는가? 장애를 가진 직원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장애인 직원의 비율은? 등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촉진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완전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존경받고 있는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보이는가: 그들은 조직을 대표하는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사회적 배경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하고 진화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고수하고 장려하는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의 특정 취약점을 존중하는 아동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가? 등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대표하는 그룹(장애인단체)로 조직되어 있는가?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은 빈곤퇴치 전략 설계와 같이 지역 사회, 지역 또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표되는가? 장애인이 정부기관 및/또는 NGO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등



영역	구분	세부내용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이 직원, 외부 고문, 이사 등 우리 조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이 리더십 위치에 있는가? 장애 직원들이 우리의 내부 역량 개발 및 우천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가? 등
책임성 강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침 질문	국가법과 CRPD 사이의 차이와 편차가 존재하는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법률, 정책,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지침 질문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불만 사항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가? 등

*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2).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in development

4) 기후 정책에서 장애포괄적 접근¹²⁾

본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따르는 파리협약 당사국들(198개국)의 기후정책 중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토대로 국가 기후정책 결정에서 장애인의 포함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파리협정 당사국인 198개국에서 UNFCCC에 제출한 NDCs(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국가자발적기여¹³⁾)를 분석하였다. 장애인, 장애인 및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만성질환자 등)를 검색하여 6가지 절차를 기반으로 협정국의 기후정책 결정과정의 장애 포용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틀을 만들었다. 위 절차는 첫째,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장애인을 지칭하는가? 둘째, 정책들의 기후 대응 과정에 장애를 포함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가? 셋째,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넷째, 정책이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포함에

12) Sébastien Jodoin et al(2022). Disability Rights in National Climate Policies: Status Report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3)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5년 마다 한번씩 제출하는 자료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가? 다섯째, 정책 거버넌스 과정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 여섯째, 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있는가로 구성되어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1) 기후 정책의 장애 포괄 분석

총 192개의 확인가능한 NDC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37개국(19%)만 NDC에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었고, 155개국(81%)에서 장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언급한 37개국 중 5개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14개국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치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광범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 변화와 영향에 따른 장애인에게 증가한 취약성에 단순히 주목하고 있었다. 다만, 14개 당사국(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코스타리카 등)만 장애를 NDC에 포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기후 변화와 재난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분화 데이터 수집에 관한 필요성, 협상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필요성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누아투(Vanuatu)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장애 포함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NDC 제목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장애인을 위한 세 가지 별도의 우선순위 영역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게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 적응 계획에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 기후 적응 계획을 시작 및 실행하는 장애인에게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후 정책에서 장애 포괄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 및 이행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4개국의 NDC만 구체적인 장애인의 권리 언급 및 장애인의 지식을 인정하고 있었고, 17개국의 NDC가 장애인의 참여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2개국의 NDC만 장애인이 NDC 개발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2) 기후 적응 정책(Climate adaptation policies)의 장애 포괄 분석

같은 분석 방법으로 파리 협정국의 기후 적응 정책을 분석한 결과 46개국(24%)이 기후 적응 정책에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었고, 146개국(76%)에서는 장애인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인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기후 적응 정책에서 기후 변화와 영향에 대한 장애인의 취약성은 인정되었지만, 매우 형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미국의 기후 적응 전략은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을 가진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와 같이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15개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기후 행동에 포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의 국가 기후 적응 정책은 장애인과 만성 질환자가 계획과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고 있고, 모든 기후 변화 대응에서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주류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1개 국가에서 장애인이 기후 적응 정책 참여를 언급하고 있었다. 역량강화(우루과이, 튀르키예 등)와 기후 적응 정책 개발에 직접적 참여(멕시코, 키리바시 등)를 통해 장애인의 참여 방안을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스페인과 같이 장애인의 참여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적응 정책에서 장애인 포괄 분석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장애인의 참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국가의 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은 취약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적응 계획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생사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어 기후 적응 정책에서 장애인의 포함을 도모해야 한다.

(3) 결론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장애인 권리 접근법은 기후정책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있어서 장애인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국의 NDCs를 분석한 결과 각 국가들은 이와 관련된 의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리협정 당사자국 중 약 20% 미만의 소수 당사국들이 장애인을 기후 정책에 포

함시키고 있었고, 그 중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국가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기후 정책 설계에 있어 UNCRPD와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태도이며, 이러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 ① 기후 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악영향 제한을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인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가스배출을 줄이는 조치
- ② 기후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효과적 참여 보장
- ③ 모든 기후 정책 설계·개발·시행·모니터링·평가에 장애인의 권리 존중·보호·충족
- ④ 다양한 기후 영향에 대해 장애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장애포괄적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
- ⑤ 장애인이 사회의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장애포괄적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
- ⑥ 장애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후 변화와 계층이 맞물려 나타나는 중첩적 불평등 상황을 인지
- ⑦ 국제협력 기후 변화 분야에 장애포괄적 접근방식 채택
- ⑧ 기후 관련 교육, 역량강화, 훈련 및 공공 참여 맥락과 당사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장애포괄적 방안을 도입하도록 보장하는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포용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



2.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는 모두 기후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관련된 사업이나 업무의 경험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후 대응 정책에 장애를 포괄하기 위한 방안,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표 IV-4>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인적 특성
참여자 1	남	장애계 전문가
참여자 2	남	
참여자 3	남	
참여자 4	남	
참여자 5	남	학계 전문가
참여자 6	남	
참여자 7	남	
참여자 8	남	

2) 조사내용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기후변화에 따른 현안 등의 문제점과 기후대응 정책방향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세부 질문을 구성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공유하고, 각 질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 질문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V-5> FGI 질문 내용

영역	주요질문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현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장애인 및 장애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영향에 대해 장애계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주체별로 제안한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 -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마련된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을 위한 조건들 중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조사결과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장애인 및 장애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장애계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여 보았다.

본 전문가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 즉 자연재해라는 재난 취약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기후변화 또는 그 위기로 인해서 많이 한 환경 문제는 사실은 자연재해가 재난 취약성과 깊이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있어서 발달장애 가족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전동스쿠터 타고 귀가하다가 태풍에 의해서 시민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그다음에 밭에서 농작물을 관리하다가 거기서 터지는 거 이젠 이제 전보를 못 받았어요. 무너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건들 모두가 개인들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취급 이래 가지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개인의 안전 사고인지 아니면 기후위기로 인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사고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참여자2)

이게 기후 위기 때문인지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홍수고 거주가 이



제 좀 불안정하고 반지하라는 구조가 위기를 초래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일반 국민들도 아직까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인식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해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여름에 굉장히 덥다든지 아니면 미국에 이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난다든지 다른 나라에 홍수가 어마하게 많다든지 하여 뉴스를 보고 기후 위기가 이제 참 위험한 상태까지 왔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아직까지는 좀 체험은 못하고 좀 인식은 낮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줄이고 탄소 양도 줄이고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후 위구나 기후 변화를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차원으로 좀 나뉘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5)

장애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어떤 계층보다도 더 악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많이 회전했던 게 코로나가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로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있었듯이 기후 위기에 의한 어떤 현상 그게 폭염이든 폭우든 가뭄이든 어쨌거나 그런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한 피해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미 기존에 불평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 이제 당할 거고요. (참여자2)

사회 경제적 격차 심화 이게 이제 영향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제 냉난방비 냉난방에 취약하다. 그러면 냉난방비가 훨씬 더 들 것이다. 근데 그것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클 것이다. (참여자6)

CRPD 제11조에서는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및 자연재해 상황을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여 보았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례를 제시하였다. 기후 위기로 인한 유류 가격 상승, 사회 시스템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장벽,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 재난으로 인한 대책 부재 등으로 의견이 있었다.

사회 시스템 및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장벽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따른 열악한 건강 환경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비장애인의 치명률보다 최

대 4배 더 높다고 이 나라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는 화석연료를 세계적으로 보편화시킨 기업들과 그걸 배정.. 억제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만... 결국 그 피해는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있고 있는 상황이지요(참여자2)

기후위기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보편은 직접 피해가 열악한 거주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식량 소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숨 쉬지도 못하고 이런 피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응해서 이제 발생하는 치매는 탄소 발생 감소를 위해서 가격이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의 부담이 이제 높아지고요. 유류 가격이 탄소 저감을 하다 보니까.. 세금 많이 붙이고 하다 보니까 유류 가격이 상승되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에 접근을 하면 괜찮은데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안 되니까 자가용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고.(참여자2)

이제 기후 위기에 따라서 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무슨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보 제공이 이제 진짜 유형 장애에 맞춰서 잘 되고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대책인데 근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맞춰서 수어로 청각장애인에게 맞춰서 또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정보 접근권 자체도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높이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참여자7)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이거 검사하거나 뭐 이거 할 때 급하다고 하면서 그냥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해가지고서 휠체어 탄 분들은 거의 접근 못하게 해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면서 아까 무슨 재난시설을 만든다든지 뭔가 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배리어프리나 그런 게 또 안 되면 아마 그런 게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참여자7)

홍수라든지 이런 각종 이제 재난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불평등한 것도 사실이고(참여자5)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제화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탄소중립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에서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후위기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는지 피해를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원회 및 기관 등에 장애를 포함하여 정책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UN 기후협약 있죠? 거기에 당사국 총회에 장애인이 의제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동 노인 들은 거기에 의제화되서 논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자기는 배제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알짜배기 글로벌 장애인들이 여기에 의제화를 장애인 의제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장애 이런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것을 일단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고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제화된. 기후 위기의 문제를 논의할 때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 또는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와 가장 필요해요. 일단은 지금 의제화되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 필요 하지만 일단은 이 논의 체계 국가적 논의 체계 안에 장애가 포함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주장으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장애를 포함해서 녹색성장위원회 안에서 정책적 활동의 기반부터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2)

이제 환경 정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장애를 모르시다 보니까 수많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제 공리주의적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거기서 빨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진짜 죽어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참여자7)

탄소중립법을 찾아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 되도록 하는 기후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정의롭게 되어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라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여기 보면 이런 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취약한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장애인, 노인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읽어보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장애인이 여기 포함됐다고 이해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할 일 하나 이 법에 법을 개정을 해서 기본 원칙의 장애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자. 그래서 장애를 명확히 놓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추진할 추진체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할 일들이 많아서 바쁘셔서,, 환경부 산하에 법인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법인 하나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그런 동력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참여자1)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각종 계획이나 위원회에 이제 장애인들의 장애계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5)

지역사회 기반 접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당사자들이 권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권리 주장에 근거해서 권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제 구체적인 방식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기후위기에 의해서 어떠한 차별을 겪고 있는지 피해를 겪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당사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 이후에 어떤 주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참여자6)

구체적으로 좀 장애인이 더 피해가 많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지만 각 부문별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의제로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영역들 이슈들의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을 제기할 수 있는지 자체를 지금 보는 것, 그 작업이 돼서 일단 출발점을 장애부터라도 잘 공감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참여자 1)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각 주체별 실행방안을 ‘개인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제시된 실행방안이 장애특성화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일반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장애인들을 통해서 기관 및 단체, 정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기관 및 단체차원에서는 장애인이 위기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제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필요가 있고, 녹색 일자리 창출이나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등 평가의 가중점을 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탄소중립법을 근거로 하여, 정책 및 제도들이 장애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법과 관련된 행정행위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장애를 잘 고려하고 있는지,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IV-6> 기후 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실행 방안

구분	개인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	-----------	---------	----	-----------



구분	개인 및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중점 방향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	효과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공공분야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계획수립, 추진 및 담론 형성	중장기 계획에 따른 실천방안
세부 실행 방안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실천, 일회용품 및 폐약품 처리하기	범분야 단체들과 연대구축, 장애인 및 장애계 대상 교육 실시, 사업 공모시 탄소중립 고려한 사업계획 제안	장애포괄 기재 마련, 장애인의 관련위원회 참여, 환경과 인권문제 딜레마 완화 노력,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탄소중립 지원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평가지표 반영,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 획 반영, 관련 법 개정, 직업재활시설 업종변경 지원

재활 서비스 기관들에 녹색 일자리 창출 쪽에 어떤 평가 시스템에서 뭔가 가치를 더 주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것들을 반영하는 서비스나 이런 데 좀 평가 어떤 실적을 평가할 때 좀 가치를 줘서 평가해 주는 이런 제도들을 좀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자6)

세부 실천 방안이 너무 일반적이다. 좀 장애 쪽에 좀 특화된 게 뭐 없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야 되는 그런 대응이라서 장애인이라면 뭘 해야 될까 그게 좀 고민이고, 그다음에 단체 역할 중에 장애인 개인들의 불평등 사례를 좀 수집하는 업무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불평등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단체들이 그 역할로서 했으면 좋겠고(참여자5)

두 번째는 장애인이 장애계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재난에 좀 특화돼 있다는 그런 지금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재난 관련 행정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관계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에 대한 인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참여자5)

개인 및 지역사회 보면 책임이 자꾸 개인한테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장애 쪽에 있어서는 이게 꼭 개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동 휠체어에 지금 고효율 배터리를 장착을 한다. 이건 개인만의 노력은 아니고 개발이 되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라... 그럼에도 개인의 삶에서 전동 휠체어에 고효율 배터리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환경 제품을 쓴다 그래도 만약에 텀블러를 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배출 안 하기 위해서 텀블러 쓰기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손으로 못 들어서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가 또 선행이 돼야 되냐면은 환경 제품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참여자7)

개인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장애 유형에 맞는 정보 제공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어로도 나가야 되고 점자로도 나가야 되고 음성으로도 나가야 되고 쉬운 정보로도 나가야 되고... 하여튼 이걸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노력이 더해준다면, 아마 정부 사회에 뭔가 더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을까(참여자7)

탄소중립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국가 전략도 수립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위원회도 있어서 활동을 하니까 그런 법과 관련된 행정행위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거기에 장애를 잘 고려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 할 일이 더 많았겠지만 2차적으로는 현재 있는 법과 법을 개정하거나 또 관련된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거 그걸 수행할 수 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전체에 생기거나 그는 또 기본 투자 단체에서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지. 그것이 일단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개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1)

우선 구매를 하든 녹색 일자리를 하든 그런 거에 공공기관이든 이런 데 가점 제도 혹은 이런 거를 정책으로 어떻게 의제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래도 계속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지금 여기도 이제 6차 종합계획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늦기도 하고 6차 종합계획의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사실 못 넣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든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다(참여자1)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6가지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개발 전략에서 장애인권 기반 접근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영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여 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 장애인에 대한 존중 강화
2. 접근성 정의 및 당면 과제 보장
3. 비차별, 기회의 균등과 성평등 강조
4.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촉진
5.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
6. 책임성 강화

장애인의 참여가 없었다. 참여가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 그냥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5번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을 통해서 2번 보장이 우선적이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안에 조건에서 원칙적인 조건으로 1번 장애인의 존중이 들어가고 3번 그다음에 비차별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6번 등이 사회 보장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준 원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안정된...(참여자2)

저는 이제 비차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접근성 보장.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다 뭐가 있다 했을 때 구체적인 접근 도구가 없으면 이제 그래서 아까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게 그래서 텀블러를 써라 그랬는데 목발 짚은 실은 사람은 텀블러를 들 수가 없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접근성을 보장해 줄까 이게 이제 장애 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성 보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참여자7)

접근성 보장이나 어떤 아주 구체적인 과제와 관련된 임박한 과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터 좀 내용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가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 강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책임 강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참여자6)

장애 포괄적 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5번 장애인의 참여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위원회라든지 정책 이런 데 있어 당연히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이 5번을 통해서 2번 접근성이라든지 3번 비차별이라든지 1번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저는 5번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정책 개발에는 참여가 있어야지 이루어지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5)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포함되어 있어 장애포괄적 정책이 마련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각각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①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

장애인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의 재활용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더위나 추위에 취약한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에너지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하는 걸 저는 조건으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됨으로써 당사자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2)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게 사실은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서 굉장히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근데 그런 장애인의 책임은 아니고 개발한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자들에게 보조기기 등에 대해서 좀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거. 그러면은 장애인들은 당연히 그걸로 구매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효율 하여튼 저탄소 배터리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자7)

② 장애인이 기후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있고, 정보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탄소중립녹색위원회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에 장애계가 포함되어야 한다(참여자2)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뭔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참여자7)

③ 모든 기후정책의 설계, 개발, 시행, 모니터링, 평가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 보호, 이행되도록 할 것

모든 기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 보다 뭘 굉장히 성급해요. 이걸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그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계속 구축하고 어떤 이행 체계를 만들어지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아까 이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선부르다. 그냥 견제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참여자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제일 그냥 맞는 말 아닐까?(참여자7)

④ 다양한 기후영향에 대한 장애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장애포용 기후변화 대응 정책 채택 및 시행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이 포괄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재난 상황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포괄하지 않으면 이동과 미시적인 문제만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재산 상황에서의 물리적인 정보적 접근 방향성에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참여자2)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좀 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정책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열악한 거주 공간에 대한 개선 정책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참여자7)

⑤ 장애인이 사회 탈탄소 노력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포용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

기후 변화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후대응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즉 딜레마를 고려해야 하고,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장애인이 사회노력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저는 현재의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는 비장애 관점에서의 정책과 많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느냐 마느냐 같은 경우에 장애 당사자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부르려면 당연히 케이블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환경파괴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르냐는 아직 그 문제가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론화의 장에서 논의하고 제대로 된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 절충의 방식으로 우리 만들어낼지에 대한 문제로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참여자2)

⑥ 기후변화 분야의 국제협력에 장애포괄적 접근방식의 채택

기후 변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례를 수집하여 이슈를 확인하고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가 제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체를 만들어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체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시너지를 줄 필요가 있다.(참여자2)

저는 좀 국제 협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후변화 관련 연구 들이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통해서 외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참여자5)

⑦ 기후관련 교육, 역량강화, 훈련 및 공공참여의 맥락에서 그리고 국가가 기후에 장애포함 솔루션을 채택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장애인과 그들의 인권을 의미있게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조치들

기후관련 교육, 역량강화, 훈련 및 공공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상 장애인복지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원주민들은 거기에 당사자성을 인정받고 논의 체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게 법안 만들면서 10년 동안 싸웠어요. 기후 위기에서 원주민들의 문제들이 거기서도 이제 중증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장애인도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아이다 등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지...(참여자2)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의 대부분 만약에 이게 제도화 안에서 책임을 조절한다고 하면 당연히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죠. 장애인복지법에 복지법에 포함되고 탄소중립기본법은 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복지법 이거 안에서도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단순히 사고 등의 기본법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된 법률 대부분 정책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은 굉장히 커요.

(참여자2)

평가의 모니터링 주체는 보건복지부.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관련 중요한 것들이 없으니까 아직은 장애인 한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 대한 제도적인 기반도 없잖아요.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링 할 포인트가 없어서 일단 되는 것을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체계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일단 범주가 굉장히 집중화돼 있고 타겟이 하나로 해서 특화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은 이것들을 장애인 친화력 이냐 장애인의 일을 잘 고려했느냐 그 입장에서 잘 수립이 되었느냐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개발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책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보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로 우리가 단위 사업들이 많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사업들이고 이게 지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딱 형태가 그러니까 딱 그림이 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취지로 그려진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때 이 기준에서 보면 어떠냐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스크리닝 할 정도 이게 스크리닝 차원으로의 차원이예요. 스크리닝 할 정도의 차원으로는 그냥 얼기설기 대응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정보 보수 사업을 한다. 한 10가지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10가지가 과연 장애인 친화적이냐 장애인이 잘 포함돼 있느냐라고 따진다.

그러면은 이것만 갖고 봐서는 더 세부적이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진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oecd에서는 그 나라의 이게 하나의 회원국이잖아요. 한 나라에서 하는 개발 수단이 많은 개발협력 사업들이 얼마큼 장애 친화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애를 먹여 그러니까 이진 좀 방식 도구가 적절하지 않다. (참여자1)

3.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 방안

1)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개념 정립

기후위기는 장마, 홍수, 폭염, 산불, 한파, 폭설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경제, 산업, 생계, 주거 등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향의 정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취약계층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성격을 가진다(박병도, 2019; 조천호, 2019).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장애인들은 건강, 생계, 재난 위험, 이동권, 정보접근 등에 취약함이 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경험하고 있는 중첩적 불평등과 더불어 기후 대응 정책 방안에서도 배제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후 대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입안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도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었다. 또한 국외 차원에서는 파리협정 198개 당사국 중 장애인을 고려한 기후 정책을 마련한 국가는 약 20% 정도로 기후 변화 대응 마련에 있어 취약계층의 고려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장애 당사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마련 시 장애인을 포괄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시켜 장애인이 기후변화 상황에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포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이란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정책 수립 과정과 집행,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2)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한 우선 과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수립과 추진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녹색성장기본법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은 기후 취약계층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나 법이나 제도에 장애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거나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해외에서도 장애인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언급을 하거나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치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수립을 위해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건강, 이동, 정보, 생계, 제도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장애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후변화는 장애인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사고 또는 사망률을 나타내고, 이것이 장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과제를 함께 확인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들, 그리고 각 주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장애가 포함된 기후변화 정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영역일 수 있으나 사업이나 정책이 새롭게 추진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관리와 모니터링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적 차원, 기관 및 단체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영역에 따른 방안들을 제시해보았다.

앞선 선행연구들에서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겪는 어려움을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적 측면에서 언급하고 장애인의 권리기반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본 연

구의 전문가 FGI에서도 주체별 역할과 장애포괄적 정책 마련을 위해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불평등 영역과 관련된다. 따라서 건강, 정보, 이동, 생계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과 문제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및 단체 차원에서는 정보, 제도적 문제와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며,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슈화가 되고 정책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관 및 단체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영역과 관련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한 정책을 입안하고, SDGs에서처럼 장애를 cross cutting 이슈로 포함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환경부 산하의 장애인단체 설립 또는 기존 환경부 산하의 NGO를 통한 장애를 고려한 정보제공, 기존 장애인단체와의 연대·협력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적으로 민·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인식과 대응을 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장애포괄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 IV-7> 장애포괄적 기후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개인적 차원	기후 변화에 대한 학습	건강, 정보, 이동, 생계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 상황 인지·학습
기관 및 단체 차원	교육 / 역량강화	정보	-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와 문제점, 대응방안 등을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 제공 - 장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
	정책 아젠다 형성	제도	- 기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인의



구분		문제영역	주요내용
정부 차원			국내외 불평등 사례 수집 - 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아젠다 형성
	취약계층 관점 고려	건강, 정보, 이동, 생계, 제도	- 기후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입안 시 다층적 불평등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고려
	정보접근성 강화	정보, 제도	- 기후 위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 매뉴얼 제작 및 배포(시각자료, 점자, 쉬운글 자료 등)
	정책 결정 시 장애인 참여 확대	정보, 제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보장 및 취약계층 범위 확대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위기는 녹색사회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재난·재해 발생시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으나 정보접근의 제한 및 대응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기후위기에 따른 장애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한 정책수립에 기여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2022년 ‘탄소중립 녹색사회를 위한 장애계 대응방안 연구’에 이어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사회에 기후변화에 따른 장애계에 변화와 경각심을 일으키고, 선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 장애인을 포함한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장애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와 국제적 변화,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인식과 기후변화로 인해 경험한 문제점이나 어려움,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고, 장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영향을 미치며, 홍수와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생계수단을 줄이면 빈곤과 굶주림이 발생하고, 감소하는 자원을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전체 지역이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언급한 모든 상황에서 장애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도 배가 되어 기후변화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빈곤하거나 낮은 교육수준,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



한 현상을 취약계층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더 높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강, 생계, 재난 위험, 이동, 정보 등과 같은 요인은 특정 취약성을 설명해준다.

셋째,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하여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며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후 UNFCCC(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장애인의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권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 거버넌스에 대해 장애를 포함하는 인권 기반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식, 기후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6.3%가 심각하다(매우심각+심각)다고 응답하였고,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97.5%(많은 영향+어느 정도 영향)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심각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더 많이 노력+노력하는 편)라는 응답이 34.6%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한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탄소중립의 의미나 환경규제 강화와 관련한 인식정도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순으로, 장애인복지단체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로는 사회전체의 참여유도,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탄소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걱정된다(매우걱정+다소걱정)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관이나 응답자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천할 때 특별히 배제된다고 느끼는 영역으로는 SDGs나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장애와 관련한 예산지원이나 별도 프로그램 부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후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근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 다소 관심)는 비율이 21.0%에 불과하였고,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노력에서도 노력한다(많이 노력+노력)는

응답이 16.0%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애계에서 필요한 노력으로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방안 모색, 장애계의 기후적응능력 향상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서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지원 및 보호,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 장애계의 참여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의제화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탄소중립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에서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기후위기에 의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위원회 및 관련기관 등에 장애를 포함하여 정책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계 대상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진 장애인들에 의해서 기관이나 단체,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의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해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존중 강화, 접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의 용어를 우선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경험을 최소화 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정책개발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변화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하여 인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외 변화, 기후변화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건강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수준에서부터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관련 시설, 단체 등 유관기관 등 장애계가 주축이 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재난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력과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젠다를 형성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RPD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도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장애인의 포함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염두해 둔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에 있어서도 장애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정에 장애인 권리기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장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의 제13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고 하며 취약계층을 언급할 뿐 장애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해외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참여 보장방안을 마련한 국가가 드물긴 하지만 포괄적으로라도 언급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 장애인 또는 장애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과 문제점, 특히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조하는 조치의 맥락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조직(NGO)와 장애계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위기에 취약한 장애인의 어려움과 장애계의 욕구사항을 제안하고 함께 아젠다를 형성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기상과학원(2018).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 그레타 툰베리(2023). 기후 책(THE CLIMATE BOOK). 김영사.
- 박병도(2019).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일감법학, (42), 111-143.
- 전의찬(2022). 기후위기 시대 국내외 ‘탄소중립’ 현황과 과제. 한국주민자치학회.
- 조천호(2019). 파란하늘, 빨간지구: 기후변화와 인류세, 지구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논의. 동아시아.
- 하바라, 정은아(2021). 가중되는 기후위기, 여성이주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도서출판 여이연.
- 한재각(2023). 기후정의. 한티재.
- 환경부(202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환경부(202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Ghenis, A. (2015):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orldinstituteondisabilityblog.files.wordpress.com/2018/09/migration-blogs-take-2.pdf
- Ghenis, A. (2018a): Heat Waves and Extreme Heat.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https://wid.org/2018/09/26/heat-waves-and-extreme-heat/>.
- Ghenis, A. (2018b): Natural Disasters. World Institute on Disability. <https://wid.org/2018/09/26/natural-disasters/>.
- IDA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2021.10.). Disability Inclusive Climate COP26 Advocacy Paper.
- IPCC(2021). Synthesis Report of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 Right for the World (2020.6.). Rights-Based Climate Action: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ww.light-for-the-world.org)
- UN DESA (2018). Disability and Development Report. p. 152. social.un.org/publications/UN-Flagship-Report-Disability-Final.pdf

Sébastien Jodoin, Katherine Lofts, Amanda Bowie-Edwards, Laurence Leblanc, & Chloe Rourke(2022). Disability Rights in National Climate Policies: Status Report. Centre for Human Rights & Legal Pluralism &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2-43pp.



부록

조사표 번호						
ID				-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장애계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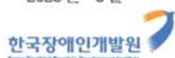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장애인 가구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녹색사회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장애계 대응 방안 연구를 2022년에 수행하였으며, 후속 연구로 후속 연구로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하고,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 환경문제에 따른 차별 및 배제 경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며, 귀 기관의 응답내용은 조사시점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8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 02-3433-0665 (leehk@kodi.or.kr)
	연구개발팀	이선화 부연구위원 070-7947-0487 (aimals97@kodi.or.kr)

기본정보	
1) 응답자명	2)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3) 응답자 연령	출생연도: _____ 연도
4) 소속 기관 유형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③ 장애인복지단체 ④ 기타()
5) 응답자 장애유무	① 유 (5-1번으로) ② 무 (6번으로)
5-1) 응답자 주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심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전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6) 응답자 연락처	해설문조사 종료 후 답례품(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미기재시 답례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용어 정의 : 기후변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IPCC의 정의)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이 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

기후변화대응 개념

기 배출된 온실가스와 향후 계속적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인간, 동·식물, 생태계 등 지구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적응 계획을 수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괄하여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함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지구 평균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 :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지구 평균기온도 올라감. 대다수 과학자들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지구 평균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함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 자연적인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함.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지구 평균기온을 점점 상승시켜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됨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 피해 :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홍수, 폭염, 가뭄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 발생, 물 부족 발생과 식량 생산량의 감소, 동식물들의 멸종 위기, 말라리아 수인성전염병·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한국의 기후변화 현상 : 기온 상승(도시 중심으로 기온 상승), 연평균 강수량 증가, 강수일수 감소 및 호우일수 증가, 해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는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대응 인식

- 1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한 등 이상기후, 홍수·태풍·산불 등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귀하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영향을 미친다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③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무엇입니까?(우선순위 3순위)
- 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 ② 세계 경제·시장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탄소중립 미이행시 투자, 수출 제약)
 - ③ 현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④ 미래세대(자녀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 ⑤ 산업 및 사회 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 ⑥ 기타 ()
- 4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책임이 크다
 - ②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③ 별로 책임이 크지 않다
 - ④ 전혀 책임이 없다
- 5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 ① 상대적으로 노력을 매우 덜 하고 있다
 - ②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는 편이다
 - ③ 상대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 ④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

6. 최근 국가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음 중 어떤 구간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 ① 최상위권 (배출량 매우 많다)
- ② 중상위권 (배출량 많다)
- ③ 중하위권 (배출량 적다)
- ④ 최하위권 (배출량 매우 적다)

II. 기후변화 대응 정책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인식

7. '탄소중립'의 뜻이나 의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③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8.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34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③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9. '2050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기본법' 입법,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추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③ 명칭 정도만 들어본 적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10.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소식 및 내용을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십니까? (모두 선택)

- ① TV
- ② 라디오
- ③ 신문/간행물
- ④ 유튜브
- ⑤ 인스타그램
- ⑥ 네이버 등 포털 뉴스
- ⑦ 페이스북
- ⑧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 ⑨ 옥외 현수막 등 거리 광고물



-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정부는 국제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습니다.(20.12)
-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문별 세부 전략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21.10.1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력발전 대폭 축소
- △재생에너지 수소 기반 발전 확대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수요 감축
-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 △탄소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 △다중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화학비료 사용 줄이고 친환경 농업 시행을 확대
-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 △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폐기물 소각매립량 최소화
- △신규 조림(숲),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11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실행
- ② 산업계, 국민 포함 사회 전체의 참여 유도
- ③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계층·노동·지역 보호
- ④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 ⑤ 기타 ()

12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항목	매우 걱정된다	다소 걱정되는 편이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1)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및 실행 중단	①	②	③	④
(2) 기업 등 산업계의 저조한 참여 및 의무 이행	①	②	③	④
(3) 국민의 무관심과 낮은 참여	①	②	③	④
(4) 이해당사자* 간 조정·협의 실패로 사회적 갈등 야기	①	②	③	④
(5) 저탄소 산업전환** 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구조 변화	①	②	③	④
(6)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①	②	③	④

* 이해당사자 :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산업계 인사, 노동계(노동자), 시민단체, 농민, 중소기업인, 취약계층, 여성, 청년, 아동 등)

* 저탄소 산업 전환 :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III.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경험

13. 귀하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 없다 ②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③ 다소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많다

14. 귀하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증가
② 정신적 스트레스 등 질환 증가
③ 전기, 가스 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
④ 장애인 일자리, 편차는 일자리 감소 문제
⑤ 식량, 서비스 등 기본적 생계 위협 문제
⑥ 기타 ()

15. 귀하에서 직접 경험하신 환경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① 홍수, 가뭄,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②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문제
③ 무더위, 강추위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에너지 요금 지출 증가
④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⑥ 기타 ()

16.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를 생각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선택)

- ①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
② 장바구니를 이용하거나 재사용 봉투나 다화용기 등을 사용
③ 철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발생 감소 노력
④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⑤ 친환경 제품 등 녹색 소비
⑥ 환경교육이나 지역 공동체의 환경운동 등에 참여
⑦ 기타 ()

2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애계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순위)

- ① 녹색사회, 기후대응 관련한 교육
- ②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후대응 관련 내용 추가
- ③ 녹색사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구축
- ④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기후대응 프로그램 개발
- ⑤ 장애계의 기후적응능력^{*} 향상 노력
- ⑥ 장애계의 기후변화 노출성^{**} 및 취약성^{***} 개선 방안 모색
- ⑦ 기타 ()

* 적응능력 :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
 ** 노출성 : 인간 및 자연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환경에 놓여지는 것(예 : 가뭄)
 *** 취약성 :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 및 성향 (예 : 가뭄으로 인한 물공급 능력 저하)

22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순위)

- ① 장애계와 기후대응 정책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 ②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장애계의 참여 보장
- ③ 장애를 고려한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투자 지원
(예 : 저상버스, 보조기기 등)
- ④ 에너지·산업 전환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보호 및 경제적 지원
- ⑤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 지원 및 보호(예 : 편의시설, 안내방송 등)
- ⑥ 탄소중립, 녹색사회 기본법에 장애관련 조항 추가
- ⑦ 기타 ()

23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필요한 지 않음	③필요함	④매우 필요
1. 정부	1) 전세가격, 기후대응 비용에 부합하는 국내 정책 추진				
	2)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방향 수립				
	3) 국내정책 추진과 모니터링에 장애인 참여 근거 마련				
	4)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홍보				
	5) 기타()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필요하 지 않음	③필요함	④매우 필요
2. 지자체	1)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사업 개발 및 추진				
	2)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				
	3)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4)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 탄소중립 실천 관련 교육 실시				
	5) 기타 ()				
3. 민간 기관	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				
	2) 지역사회 내 장애인 대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3)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녹색운동, 탄소중립 실천				
	4) 녹색사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				
	5) 기타 ()				

♣ 조사에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애포괄적 기후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발 행 일 : 2023년 10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유-파트너 보호작업장

ISBN 978-89-6921-494-2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